

# 보건복지 ISSUE & FOCUS

**KIHASA**  
한국보건사회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 
Health and Social Affairs  
www.kihasa.re.kr

제 302호 (2016-02)  
발행일 2016. 01. 18  
ISSN 2092-7117

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30147)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(1층-5층) TEL 044)287-8000 FAX 044)287-8052

##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



김미곤  
부원장·선임연구위원

- 노인 및 아동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'인구 보너스' 기간(2000-2020년)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(momentum) 마련이 필요함.
- 성장패러다임을 '소득주도 성장(Income-led growth)'으로 전환하고, 재정적자 및 불평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(Inequality Indexation Tax)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아울러, 체계적·포괄적·예방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, 사회복지제도 간, 사회복지와 노동 시장 간의 선 순환적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.

## 1. 보건복지 환경변화

### 가.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전망

#### ■ 초저출산 기조의 지속

○ 저출산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,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급감하는 동시에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.

-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 1.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이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. 초저출산율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3년('03~'05), 독일이 4년('92~'95)이었음.

- 만혼화(晩婚化)와 초산 연령의 노령화, 높은 양육비용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■ 기대수명의 상승

○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.1세, 1990년 71.3세, 2014년 82.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, 향후에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■ 인구고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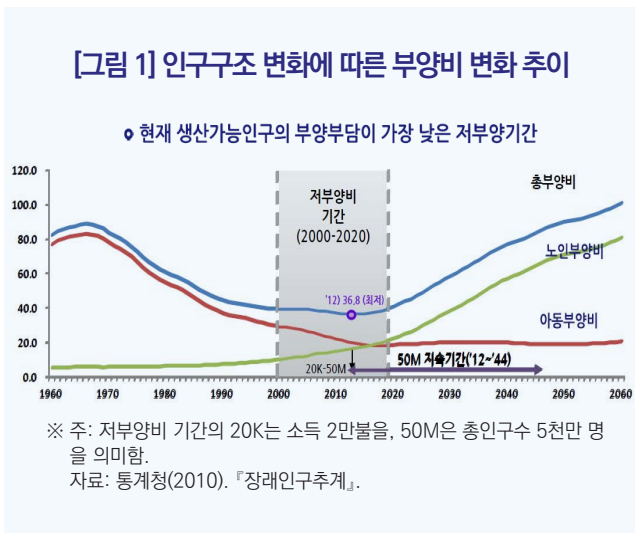
○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(노인인구 7%)에 진입하였고,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%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, 2025년에는 20%대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됨(통계청).

-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.2%로 급증하여, 일본(39.6%)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(OECD 평균 25.8%).

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의 급등

- 2012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3.1%로 정점(생산가능인구수는 2016년에 3,704만명으로 정점)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  -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부양비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.

-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저부양비 기간 동안, 국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준비해야, 이후 고령화된 시기에도 '지속가능한 성장'과 '국민행복'의 시대를 담보할 수 있음.



나. 경제전망

■ 경제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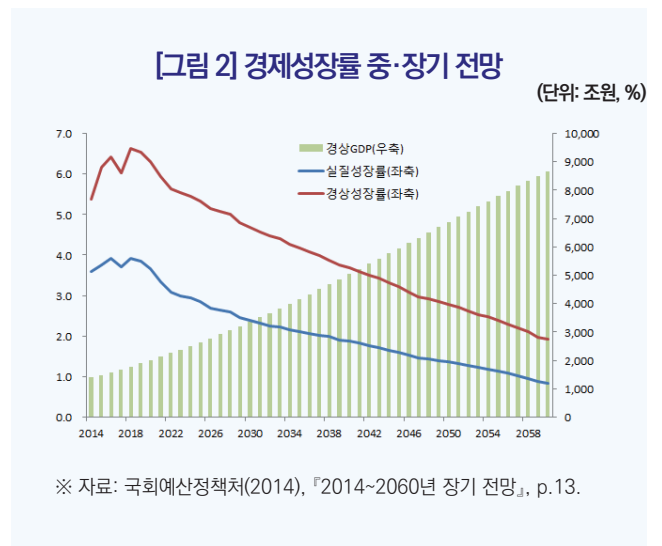
- 주요 기관들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3%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나,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.
  - 수출 감소세, 내수 회복세 부진, 고용률 정체, 가계부채 급증 등의 국내 여건으로 현재의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
  - 중국의 성장세 둔화,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,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〈표 1〉 주요 기관의 2015년 및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

| 기관        | 한국은행 | KDI  | 국회예산정책처 | IMF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2015년 추정치 | 2.8% | 2.6% | 2.6%    | 2.7% |
| 2016년 전망치 | 3.2% | 3.0% | 3.0%    | 3.2% |

※ 자료: 각 기관의 2015년 연말 기준 발표치

-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은 저출산·고령화,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  -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(2014)에 따르면,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%대에서 2030년 후반에는 1%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됨.



■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 전망

- 가계부채 문제는 민간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평가됨(국회예산정책처, 2015.9).
  - 2015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민간 사채 등을 제외하고도 1,133조원을 넘어섰고, 2015년 말에는 약 1,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- 국가채무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, 2000년 111.2조원(GDP대비 17.5%)에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됨.

〈표 2〉 국가채무 추이

(단위: 조원, %)

| 구 분        | 2000  | 2005  | 2010  | 2013  | 2014  | 2015  | 2018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국가채무       | 111.2 | 247.9 | 392.2 | 489.8 | 527   | 570.1 | 691.6 |
| (GDP대비, %) | 17.5  | 27    | 31    | 34.3  | 35.1  | 35.7  | 36.3  |
| 중앙정부       | 100.9 | 238.8 | 373.8 | 464   | 499.5 | 544.6 | 669.5 |
| 지방정부 순채무   | 10.2  | 9.2   | 18.4  | 25.7  | 27.4  | 25.5  | 22.2  |
| 적자성 채무     | 42    | 100.8 | 193.3 | 253.1 | 282.7 | 314.2 | 400.2 |
| 금융성 채무     | 69.1  | 147.1 | 199   | 236.7 | 244.3 | 255.9 | 291.4 |

※ 주: 2014년 이후는 '14~18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전망 수치이며, 지방정부 순채무는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것임.  
 자료: 기획재정부, e-나라 지표(2014.11.09. 다운로드)

■ 가계소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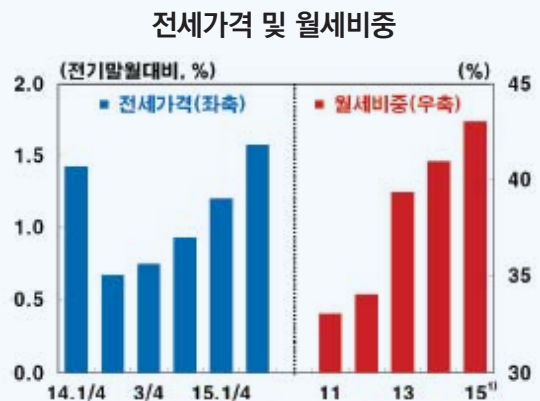
- 가계부채 누증과 주거비 부담 확대 등은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에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(한국은행 2015.7).
-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금상환부담 증가가 소비여력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,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은 2010년 6.4%에서 2014년 26.5%로 상승함.

- 전세가격 급등과 월세 전환율 증가로 인해 소비성향이 높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될 것임. 2015년 5월 기준 월세비중은 약 43%에 이르고 있으며, 낮은 이자율, 집값의 상대적 안정세,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.

[그림 3] 가계신용과 전세가격 및 월세비중



자료 : 한국은행



주 : 1) 15.1~5월 기준  
 자료: 국민은행, 국토교통부

※ 자료: 한국은행(2015.7). 『경제전망보고서』

다. 노동시장 전망

■ 최근 노동시장 지표

○ 2010년 61.0%이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62.4%로 1.4%p 상승하였고, 고용률은 2010년 58.7%에서 2014년 60.2%로 증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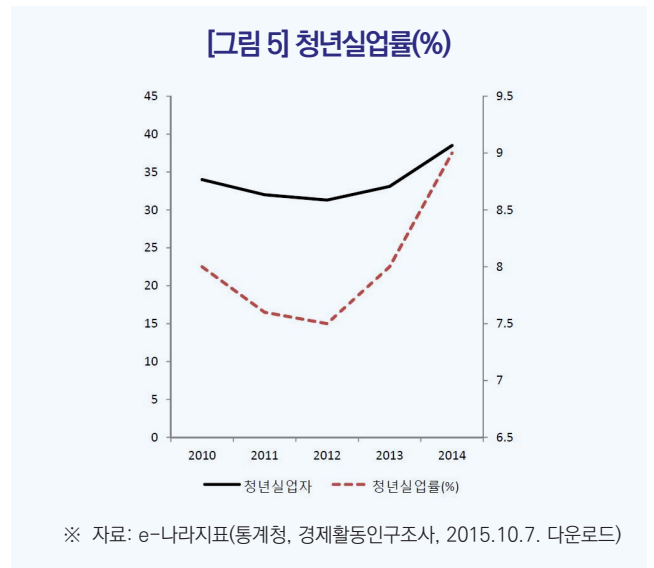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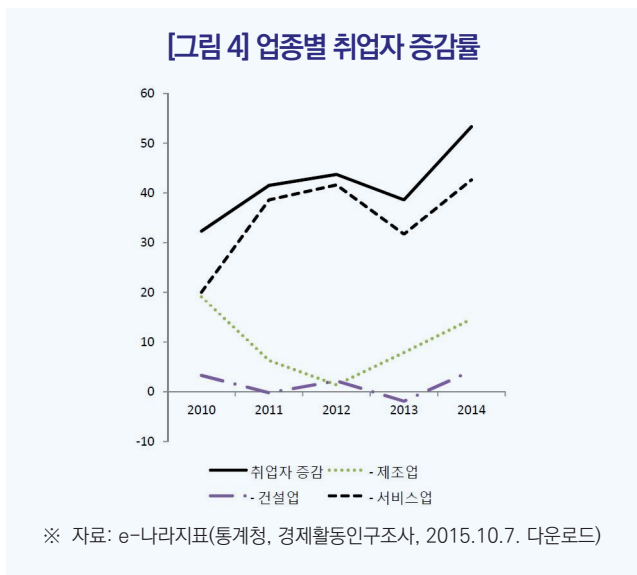
〈표 3〉 주요 노동관련 지표 추이

(단위: 천명, %)

| 구분      | 2010   | 2011   | 2012   | 2013   | 2014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5세이상인구 | 40,590 | 41,052 | 41,582 | 42,096 | 42,513 |
| (증가율)   | 1.2    | 1.1    | 1.3    | 1.2    | 1.0    |
| (증감수)   | 498    | 462    | 530    | 514    | 417    |
| 경제활동인구  | 24,748 | 25,099 | 25,501 | 25,873 | 26,536 |
| (증가율)   | 1.5    | 1.4    | 1.6    | 1.5    | 2.6    |
| (증감수)   | 354    | 351    | 402    | 372    | 663    |
| 취업자     | 23,829 | 24,244 | 24,681 | 25,066 | 25,599 |
| (증가율)   | 1.4    | 1.7    | 1.8    | 1.6    | 2.1    |
| (증감수)   | 323    | 415    | 437    | 385    | 533    |
| 실업자     | 920    | 855    | 820    | 807    | 937    |
| 비경제활동인구 | 15,841 | 15,953 | 16,081 | 16,223 | 15,977 |
| (증가율)   | 0.9    | 0.7    | 0.8    | 0.9    | -1.5   |
| (증감수)   | 143    | 112    | 128    | 142    | -246   |
| 경제활동참가율 | 61.0   | 61.1   | 61.3   | 61.5   | 62.4   |
| 실업률     | 3.7    | 3.4    | 3.2    | 3.1    | 3.5    |
| 고용률     | 58.7   | 59.1   | 59.4   | 59.5   | 60.2   |

※ 자료: www.kosis.kr(2015.10.7. 다운로드)

○ 최근 3년 동안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 7.5%이던 청년실업률이 2015년 9.2%로 급등하였음.



■ 고용 전망

○ 국회예산정책처(2015.9) 등에 의하면, 2016년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고 대외여건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제조업의 견실한 고용증가세가 유지되기는 어렵지만,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- 특히, 정부의 청년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영향 등으로 2016년에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상승하고, 실업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그러나 일자리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인구구조, 고용률, 잠재성장률, 1% 경제성장 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 등을 감안한 단순 추계에서는 2020년 전에 일자리 수요공급이 거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, 그동안 누적된 과잉 노동력 등을 감안하면, 2020년 중반 정도에 일자리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추계됨.
- 따라서 2020년 중반까지는 소위 '88만원'세대로 표현되는 청년층의 급격한 실업률 증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움.

라.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전망

■ 빈곤과 불평등도 추이

○ 중위소득 50% 기준 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.

- 다만 2인 이상 도시가구의 빈곤율은 2010년을 전후로 증가세를 멈추고,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. 반면,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.

○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빈곤율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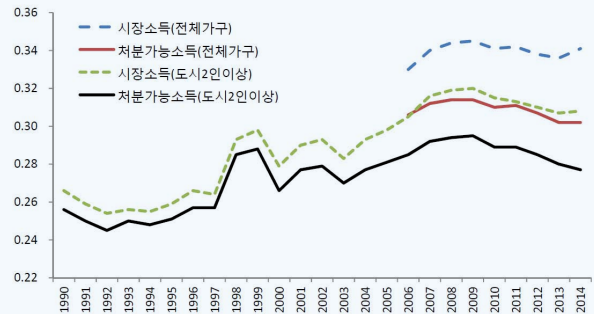
- 2010년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선 듯 보이지만, 2014년 다시 소폭 증가함.

[그림 6] 빈곤율 추이(중위소득 50%)



※ 자료: www.kosis.kr(가계동향조사, 2015.10.7. 다운로드)

[그림 7] 불평등도 추이(지니계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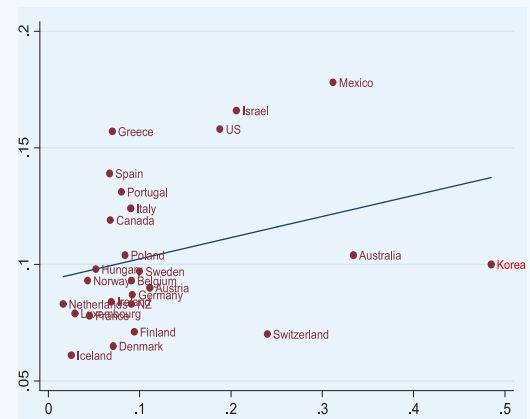


※ 자료: www.kosis.kr(가계동향조사, 2015.10.7. 다운로드)

■ OECD 국가들과의 빈곤 및 분배지표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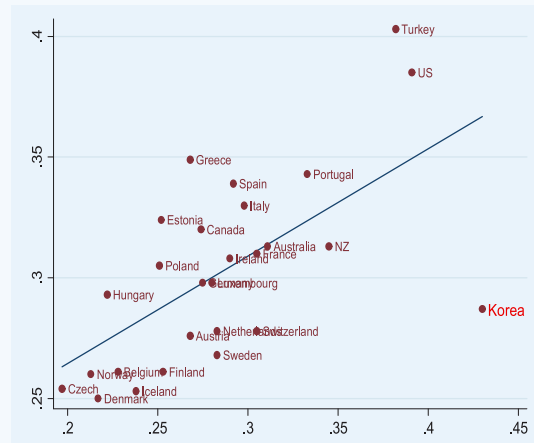
○ 근로연령인구의 빈곤과 불평등도는 낮은 수준이나, 노인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임.

[그림 8] OECD 국가의 빈곤율



※ 자료: stats.oecd.org(2015.7.15. 다운로드)(빈곤율 기준연도는 2011 또는 2012년임)

[그림 9] OECD 국가의 불평등도



※ 자료: stats.oecd.org(2015.7.15. 다운로드)

■ 빈곤 및 불평등 전망

- 빈곤 및 불평등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, 고용 없는 성장,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, 인구고령화, 낙수효과(trickle down effect)가 없는 경제체계, 낮은 복지수준 등의 거시적인 요인과 건강의 악화, 낮은 교육수준, 빈곤문화 등 다양한 미시적인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함.
- 복지라는 측면에 한정할 경우, 공적이전소득, 즉 재분배(복지정책)가 잘 이루어질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 및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음.
  -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이하이고, 그 결과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약 14.1%(2012년)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적인 빈곤율 개선효과(약 59.9%)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.

〈표 4〉 OECD 국가의 빈곤율 개선 효과

(단위: %)

| 구분     | 시장소득 빈곤율(A) | 가처분소득 빈곤율(B) | 빈곤 개선율 ((A-B)/A*100)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     | 16.3        | 14.0         | 14.1                 |
| 스웨덴    | 26.7        | 5.3          | 80.15                |
| 프랑스    | 30.7        | 7.1          | 76.87                |
| 영국     | 26.3        | 8.3          | 68.44                |
| 독일     | 33.6        | 11           | 67.26                |
| 캐나다    | 24.5        | 11.7         | 52.24                |
| 호주     | 32.7        | 12.4         | 62.08                |
| 일본     | 26.9        | 14.9         | 44.61                |
| 미국     | 26.3        | 17.1         | 34.98                |
| OECD평균 | 26.4        | 10.6         | 59.85                |

※ 주: 중위 50%기준, mid-2000년, 한국은 2012년 기준  
 자료: 외국: OECD 홈페이지(<http://stats.oecd.org/index.aspx>).  
 한국: 임완섭외, 2012년 빈곤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계산

-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도 빈곤율 개선효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임.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약 8.8%이나, OECD 평균은 약 31.1%임.

〈표 5〉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

(단위: %)

| 구분     | 시장 지니(A) | 가처분 지니 (B) | 개선율 ((A-B)/A*100)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한국     | 0.329    | 0.300      | 8.81              |
| 스웨덴    | 0.43     | 0.23       | 46.51             |
| 프랑스    | 0.48     | 0.28       | 41.67             |
| 영국     | 0.46     | 0.34       | 26.09             |
| 독일     | 0.51     | 0.3        | 41.18             |
| 캐나다    | 0.44     | 0.32       | 27.27             |
| 호주     | 0.48     | 0.3        | 37.50             |
| 일본     | 0.44     | 0.32       | 27.27             |
| 미국     | 0.48     | 0.38       | 20.83             |
| OECD평균 | 0.45     | 0.31       | 31.11             |

※ 주: 외국 mid-2000, 한국 2012년 기준  
 자료: 외국: OECD 홈페이지 (<http://stats.oecd.org/index.aspx>).  
 한국: 임완섭 외, 2012년 빈곤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계산

-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,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 전망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,
  -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취업률이 다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.
  - 무엇보다도,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성숙과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효과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 특히 국민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의 실시로 인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빈곤 갭이 단기간 내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.
  - 그러나 경기전망이 밝지 않고,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한다는 측면에서 단기간 내에 빈곤과 불평등이 개선되리라는 낙관적 기대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임.

마. 복지재정 전망

■ 복지재정 국제비교

-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저부담-저복지유형(C형)의 국가에 속함.
  - 우리나라의 2014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.4%로, OECD 평균(21.6%)의 48.1% 수준임.

■ 공적 사회지출 전망

- 급격한 인구고령화, 공적연금 등 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자연 증가, 기초연금·장기요양보험·무상보육과 양육수당

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 등을 감안할 때, 공적 사회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GDP 대비 29.0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〈표 6〉 주요 OECD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 및 한국의 장기 추계

(단위 : GDP 대비 %)

| 구분      | 1980 | 1985 | 1990 | 1995 | 2000 | 2009 | 2014 | 2030 | 2040 | 250  | 2060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스웨덴     | 27.1 | 29.5 | 30.2 | 32.0 | 28.4 | 29.8 | 28.1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덴마크     | 24.8 | 23.2 | 25.1 | 28.9 | 26.4 | 30.2 | 30.1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프랑스     | 20.8 | 26.0 | 25.1 | 29.3 | 28.6 | 32.1 | 31.9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독일      | 22.1 | 22.5 | 21.7 | 26.6 | 26.6 | 27.8 | 25.8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영국      | 16.5 | 19.4 | 16.7 | 19.9 | 18.6 | 24.1 | 21.7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미국      | 13.2 | 13.2 | 13.6 | 15.5 | 14.5 | 19.2 | 19.2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일본      | 10.3 | 11.1 | 11.1 | 14.1 | 16.3 | 22.2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한국      | -    | -    | 2.8  | 3.2  | 4.8  | 9.6  | 10.4 | 17.9 | 22.6 | 26.6 | 29.0 |
| OECD 평균 | 15.5 | 17.2 | 17.6 | 19.5 | 18.9 | 22.1 | 21.6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
※ 자료: 사회보장위원회(재정추계소위원회)(2014.1, p.5); 2014년 자료는 stats.oecd.org.

2. 보건복지 환경변화의 영향 및 시사점

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및 시사점

-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, 병역자원 감소,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노인부양비를 증가시킴.
- 고령화는 노인의료비 및 연금급여 증가로 이어지므로 사회보장비 증가를 유발시키고,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함.
- 2000-2020년까지의 노인 및 아동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'인구 보너스' 기간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(momentum) 마련이 필요함.
-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급증은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와 서비스 공급의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.

■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 및 시사점

- 중·장기적 잠재경제성장률 하락은 신규 고용률 저하로 이어져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. 그리고 국가채무와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세입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

- 2015년 말 기준 약 1,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는 국가경제의 위험요소이고, 인구고령화, 전세의 월세전환 등과 맞물려 소비절벽을 야기할 수 있음. 이는 다시 내수위축과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.

- 따라서 이윤주도 성장(Profit-led growth)과 부채중심 성장기조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함.

■ 노동시장 변화의 영향 및 시사점

-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저임금근로자 비율,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,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.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함.
- '88만원 세대'로 표현되는 청년층의 급격한 실업률 증가는 희망의 상실을 초래하고, 국민행복을 저해하게 될 것임.
- 노동이 본(本)이라면 복지는末(末)에 해당되므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으로 복지 부담을 줄이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.

### ■ 빈곤·불평등 변화의 영향 및 시사점

-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낙수효과가 사라졌음. 노인세대의 상대빈곤율은 높고, 분배상태는 OECD 국가 중 예외적으로 나쁨.
- 분배상태가 높아질 경우 사회이동을 저해하고(Wilkinson & Pikett; 2009, Corak; 2013), 건강사회 문제를 증가시킴(Wilkinson & Pikett; 2009). 또한 중산층 감소로 이어져 질 수 있으며, 이는 사회건강성을 저해하게 될 것임.
- 따라서 빈곤·불평등 증가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- 중산층 붕괴 방지를 위한 사회보험 보완 및 긴급지원 제도 확충
- 빈곤층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보장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기초연금, 장애연금 등) 보강
- 인구 특성별(근로계층, 노인, 아동 등)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
  -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보장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, 노인에 대해서 생계보장, 의료,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, 건강한 노인에게는 노인 적합 일자리 제공,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, 교육, 사회서비스 강화

## 3. 보건복지 정책방향

### ■ 소득주도 성장과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 검토 필요

-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에 대한 치유 없이 복지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'사후약방문'이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됨.
  - 따라서 정책기조를 현재의 '이윤주도 성장(Profit-led growth)'에서 '소득주도 성장(Income-led growth)'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연대주의적 임금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로버트 실러(Robert Shiller)가 제안한 불평등이 악화되면 자동적으로 누진성이 높아지는 불평등 연계 조세(Inequality Indexation Tax) 검토가 필요함.
  - 불평등 연계 조세가 도입되면, 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여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세율이 올라가므로 임금인상 등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.
  - 반대로 불평등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부자들이 저항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,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와 성장 친화적 정책 간에 정치적 교환이 가능함.

### ■ 체계적·포괄적·예방적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

- 소득계층별 대응 전략 마련

### ■ 사회복지제도 간,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간의 선 순환적 연계성 제고

- 사회서비스 확충이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제 확보
- 주민지원센터(동사무소)와 고용안정센터의 연계성 강화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
- 근로장려세제(EITC)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대납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

### 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

-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성 및 복지 체감도 증진
-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제도 확충을 통한 부정·과잉 급여 축소

### ■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

- 만성질환 급증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비용-효과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
- 환자중심 보건 의료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확충
-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공급과 아급성(Sub-acute)질환 관리체계 확충
- 호스피스, 완화의료, 웰 다잉(well-dying)등을 위한 서비스 개발

집필자 김미곤 (부원장·선임연구위원)  
문의 044-287-8203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 
<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>

**KIHASA**  
한국보건사회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